

계육산업 발전방안

“한 국가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츠네츠(Simon Smith Kuznets)의 말이다. 그렇다. 중진국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잘 살아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농업은 큰 의미로써 어업과 축산업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

양계업은 채란·육계·종계 등 3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큰 산업이다. 이러한 커다란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나, 양돈, 한우, 낙농분야와 달리 산란계 및 육계 자조금 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천 명당 닭 집 1곳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닭 집은 치킨 가게를 뜻하는 것으로 그만큼 닭고기가 얼마나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소비량은 많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계육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3.3kg이다. 닭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브라질 등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 삼겹살 소비가 많고 닭고기는 주식보다는 간식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국가와는 달리 통닭 형태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노력들과 더불어 닭고기의 부위별 소비를 유도한다면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2003년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래, 정부의 미흡하고 미숙한 대처는 양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

+ 특별기고 I



유성엽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무소속/정읍)

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양계산업은 국내 소비 시장의 위축은 물론이고 계열사들의 존속 여부마저 위태로웠었다.

이러한 과거의 과오는 절대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꾸준한 닭고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닭고기나 계란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조류인플루엔자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음성만 발견이 되어 조리하여 먹는다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금류는 익혀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가금류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조류와 접촉가능성이 없는 일반국민은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럼에도 있을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이었던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생균제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무항생제 면역증강물질을 지원하거나 하면 친환경 축산시설과 장비도 지원했다고 하니 AI를 막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농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의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소비촉진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돼지고기를 비롯한 닭고기까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사태와 원자재 폭등 파동은 대부분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사료 공급으로 인해 양계인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다. 게다가 주요 사료원료인 옥수수과 대두박 가격이 하향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환율까지 폭등하여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따라서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유기사료를 통한 유기축산의 경우 규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또 다른 대안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은 축산물 생산에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농법으로 경종농산물의 무농약 농산물 수준의 친환경축산물이다. 게다가 인증 조건 또한 까다롭고 사후 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지원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시장을 확대 성장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2012년부터 시행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무항생제 축산물의 충분한 공급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국정감사 내내 친환경 복합

순환영농법의 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는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고유가·고비용·고사료 삼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영농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거지에 입지하기 곤란한 축사를 농지 한 가운데로 끌어내서 다량의 축분을 이용하여 액비를 생산하고 이를 주변 농지에 살포함으로써 유기농업이 완성될 수 있다. 아울러 주변 농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이모작이 가능한 청보리 등 조사료를 재배하여 이를 사료로써 공급하게 되면 역시 유기축산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사단지에서 필요한 동력원은 축분에서 생산되는 Bio-energy를 사용하면 된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되었고, 현실가능한 시나리오이기에 필자가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란 시장 역시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 인프라의 구축일 것이다. 생산된지 한 달 이상 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계란을 살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를 규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된다면 경쟁력 또한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일본의 경우 계란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량 회수조치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렇게 된다면 계란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결국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와 더불어 계란 가격 결정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도매시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계란가격은 상인과 농가 간의 흥정에 의해 그때그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높은 마진이 붙는 형국을 연출하게 되고, 가격이 일정치 않으면 소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고 양계농가 역시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도매시장이나 제도를 통한 가격 일정제의 실시가 시급하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농업기법을 개발, 적용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유기축산, 유기농업, 내수면어업, 수생식물 생산이 공존하고 순환하는 복합영농의 실현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농축수산업을 순환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회원제로 운영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또는 직접 재배, 생산한 농축산물을 자신 가정의 식탁으로 옮기면서 유통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prosumer의 진정한 개념이 아닐까? 